FLEISHMANHILLARD

From Debate to Dia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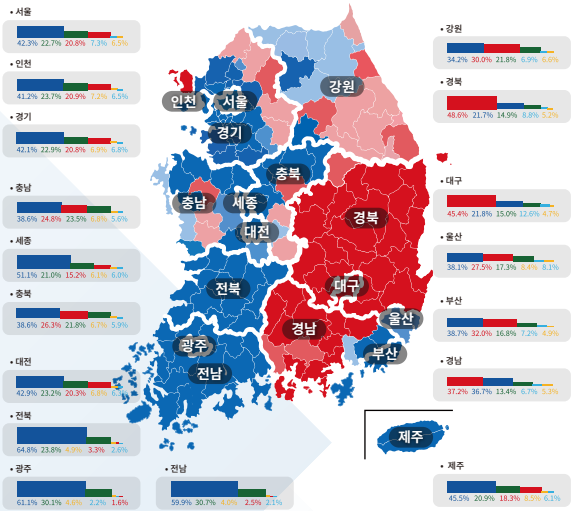
2017 South Korea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FH's PERSPECTIVES
Ma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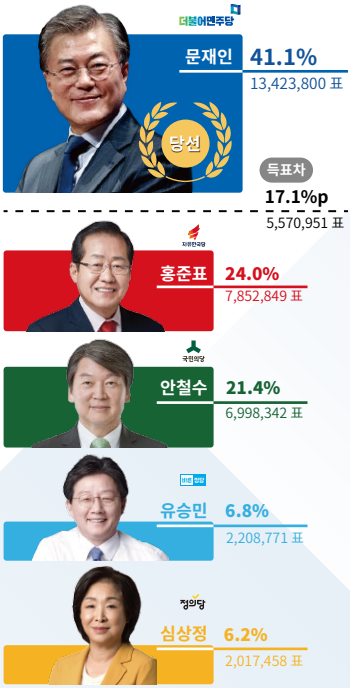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집회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견인함에 따라 60일 만에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는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시사점, 주요 공약의 추진 전망, 향후 정치 일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될지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치러진 최초의 선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최대 표차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으나, 41% 득표율의 대통령과 국회 의석의 40%만 차지한 집권당에는 나머지 약 60%를 포함한 국민 모두를 섬기는 통합의 정치 구현이야말로 당연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목적의 '토론'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대화'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내각 구성에서부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전국/지역별 개표현황



• 개표결과



• 투표율

투표자:	32,807,908 명	77.2%
총 유권자 :	총 42,479,710 명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I. 이번 선거의 시사점

No surprise!

- 2017년 1월 1일 이후 모든 여론 조사에서 일관되게 대통령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유지했습니다.
- 다섯 명 후보의 1위~5위 득표 순위와 후보 소속 정당의 의석 수 순위가 일치했습니다.
- 사상 최대 표차가 났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석 점유율인 40%와 대통령 득표율이 거의 일치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투표 전에 이미 널리 예측됐습니다. (SBS/칸타 코리아 5월 3일 조사: 71.8% 당선 가능성)

Why?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 보수진영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대항마를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 진보진영의 결속은 탄탄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0%대 지지율(5월 1일자 한국 리서치 11.4%)을 보인 적도 있지만 실제 득표율은 6.2%에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치고 나올 것을 우려해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이 차선의 후보에게 투표한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대선에서 62.5%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50대 유권자층이(지상파 3사 출구조사 기준), 이번 선거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26.8%의 지지율 만을 허락하는 역습을 보였습니다. (지상파3사 발표 출구조사 결과-50대 연령층: 36.9%-문재인, 26.8%-홍준표, 25.4%-안철수)
-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를 위한 투표 보다는 '소신 투표', '가치 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이상 득표한 후보가 대선 역사상 최초로 5명이나 탄생했습니다. 5개 주요정당 모두 다양한 지지 기반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호남에서 이번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린 현상은 확실히 정권 교체를 할 후보에게 표를 밀어주자는 '전략 투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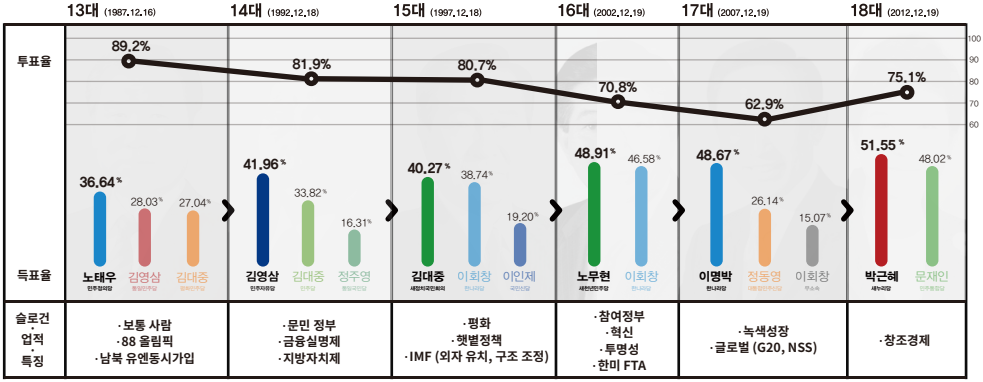
II.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시사점

- 국가적 의제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통 미디어의 역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차례의 TV토론이 민주주의 광장(아고라)의 역할을 하면서 선거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했습니다.
- TV토론에서 나온 많은 콘텐츠들이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돼 SNS로 확산됐습니다. 선거 기간이 짧고, 주요 후보가 5명이나 되다 보니 후보자들을 알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컸고, 특히 분열된 보수 부동층에서 이러한 요구가 컸던 점이 TV토론 흥행에 성공적 토양이 됐습니다.
- TV토론이 판세를 좌우할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되다 보니, TV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 TV토론 이전에 이미지를 만들고, TV토론을 통해 이미지를 공고히 다지는 전략이 중요한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지지율 상승 국면에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들의 공세를 넘어서지 못하는 바람에 지지자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TV토론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는 전략을 확실히 펼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 TV토론에서 페이스북 라이브와 페이스북 포스팅을 활용한 실시간 SNS 응원 중계 문화와 토론회 직후 인상적 장면을 담은 이른바 '짤방'이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전 대선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TV토론 시청 형태를 보였습니다.
- 모든 후보가 빅 데이터 분석 자료를 의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국정운영/기득권 세력' → '통합정부' → '정권 교체' 중심으로 키워드가 변화했고,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계파 패권주의'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가 5월 6일까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온라인상 '가짜뉴스'가 38,657건으로 지난 대선보다 6.3배나 늘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이었습니다. 주요 후보 캠프들은 팩트체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언론사들은 TV토론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단을 운영해 검증하는 시도로 호평을 얻었습니다. 가짜뉴스의 범람이라는 SNS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매체와 학계가(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fact check) 손을 잡는 등 자생적 노력도 있었습니다.
- 극장, 백화점, 식당, 커피숍, 전통 시장, 호텔, 야구장 등지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할인 이벤트들이 펼쳐지면서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인 26.06%에 달했습니다. '국민투표 로또' 인증샷 이벤트에는 9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했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추첨 생중계도 2만 5천명이 지켜봤습니다.
- 2014년 여론조사 등록제 도입에 이어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까지 도입된(2017년 1월) 첫 대선이었습니다. 선관위 등록 기준 467건의 여론조사가 실시됐으며, 이의신청과 선관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적격 조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진 만큼 여론조사의 영향력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적지 않은 인사들이 연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고 출마를 포기했던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 역대 대선 투표 / 득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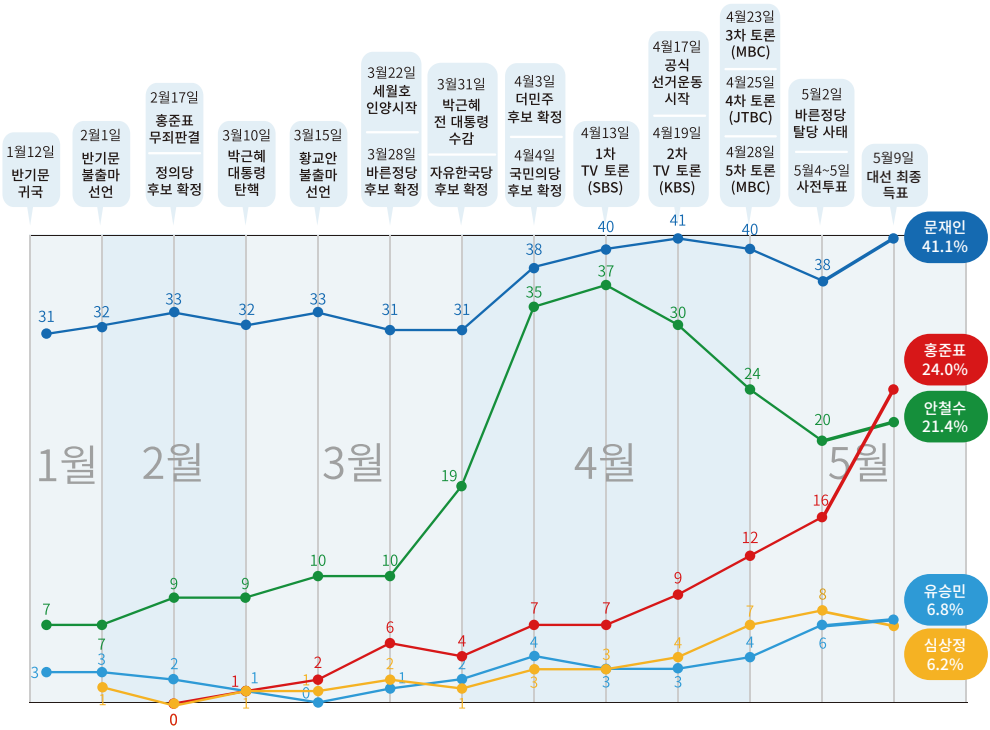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5%이상 득표자만 표기

III.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 (1월~5월)/ 단위 : %

출처:한국갤럽



IV. 공약

- 수많은 공약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 것이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기업들은 경제민주화 조항의 구체화와 소비자 주권, 생명권 및 환경권, 정보 기본권 및 안전권 등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기본권 개정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산업군과 무관하게 다양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들을 각 후보의 입장 및 소속 정당의 의석 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입법부 동의 외에도 재원 마련,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추가적 요소에 대한 고려 필요
* 통합을 강조하는 새 정부인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약 사항이 새로운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 필요
* 본 비교표는 각계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리했으나 FH 주관적 판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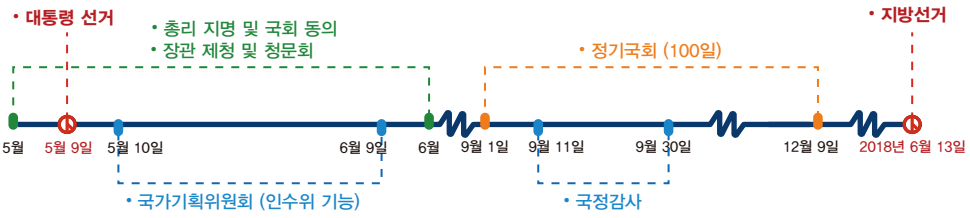
문재인 (41.1%) 더불어민주당 (120석)	홍준표 (24.0%) 자유한국당 (106석)	안철수 (21.4%) 국민의당 (40석)	유승민 (6.8%) 바른정당 (20석)	심상정 (6.2%) 정의당 (6석)	·대통령 공약 실현 가능성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공부문 3-5%로)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 미가입자) •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시 지원 도입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설치	민간 창출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 (매년 10만명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민간 창출 한시적 청년고용보장 (중소기업취업시 연 600만원 지급) • 구직청년 훈련수당 지급	민간 창출 대기업 고용증대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정규직 채용 규제) • 중소기업 임금 인상 (2018년부터 연평균 15% 씩 인상) • 창업위한 혁신 안전망 (연대보증제도 폐지)	공공 창출 청년고용할당제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 5% 이상 고용 의무화) • 청년실업부조 도입 (15~35세로 고용보험 혜택 못 받는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50% 지급)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야권의 반대가 많아 정기국회 예산 심의 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됨 일자리 창출이 대통령 핵심 공약 사항인 만큼 야당을 대상으로 한 당정의 협상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노동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육아휴직)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고용부담금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알바존중법 제정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 정규직 전환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 비정규직 출구규제 제도 시행 • 직무형 정규직 모델 마련 •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기간제 채용 금지 • 차별 업주에 징벌적 배상제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 • 공공기관, 대기업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 • 업종별 임금 산정 가이드 마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 협의를 통해 입법부 차원의 비정규직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
칼퇴근법 제정 • 주당 최대 68시간 행정지침 폐기,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주당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 연장근로시간에 휴일 근로도 포함 • 노동시간 특례업종 26개에서 10개로 축소	주당 52시간 준수 • 연장 근로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 여부 기록 보존 •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연속휴식' 보장 • 포괄임금제 개선	칼퇴근법: 야근금지, 정시퇴근, 퇴근 후 미취학부모 및 임신여성 최소 12~13시간 휴식 보장 •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 • 최대 근로시간 규정 (250시간) 도입	2022년부터 주 35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5시 퇴근제) • 주당 최대 68시간 행정지침 폐기 • 맞벌이 부모 출퇴근 시간선택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모든 정치 진영이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함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관측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전담근로감독관제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 생계비 포함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상습 위반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제 •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영세업체·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3년간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체불임금 전액 국가가 보장 • 악성체불업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치권 모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큰 방향성에 동의함으로 시기 조정 협의 후 추진될 것으로 보임

출산 후 3개월까지 2배 인상 (상한액 100만원 →200만원) •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유급: 3일-10일, 무급 2일-4일)	상한액 100만원→200만원	초기 3개월 통상임금 100% 보장 • 4~9개월 통상임금의 40→60%로 상향 (상한액 150만원) •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유급: 3일-30일)	상한액 100만원→200만원 • 통상임금의 40→60%로 상향	상한액 100만원→150만원 • 육아휴직기간 12→16개월 •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유급: 3일-30일)	시행 시기 등 세부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으로 전망
사회복지 (실버 지원, 주택, 보육)					
기초 연금 30만원 지급 노인 일자리 80만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재취업 교육 강화 국공립치매요양시설 확대	기초 연금 30만원 지급 입원비 본인 부담 절반	기초연금 인상 공공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공공 실버 임대주택 도입	각 당의 공약사항에 대부분 반영됨. 재원 문제가 있더라도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으로 예상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확대	청년.신혼부부 100만 가구 공급	청년임대 10만가구 공급 및 월세 지원	청년 주택 15만 가구 공급	대학생 주거 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초등학교 완전 돌봄 체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30만원 지급	
재벌 개혁 (거버넌스,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산 분리)					
불법경영승계 근절 • 공공부문 근로자 이사제 도입 민간으로 확대 • 집중투표제로 경영구조 투명화 • 전자&서면 투표제 도입 • 금융보험사의 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기존 순환출자 임기 내 해소 •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강화 •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재벌총수 사면 원칙 대로 •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확대 • 기업 기 살리기로 경제 활성화 • 대기업 강성 귀족노조 관행 개혁 • 상법개정안 일부 찬성	재벌일가 과도한 보수체계 등 손질 • 비리 기업인 경영참여 배제 • 공익법인 통한 의결권 행사 제한 • 재벌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 상법개정안 찬성	재벌총수 일가 사면 복권 제한 • 비리 경영인 경영권 참여 불가 제도화 • 일감몰아주기 원천 차단 • 불공정하도급 배상액 대폭 상향 • 상법개정안 선별적 찬성	재벌 범죄 수익의 환수 및 처벌 강화 • 지주회사 요건 강화 • 세대생략상속 증여 시 할증과세 50% • 출자종액제한제도 재도입 •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 상법개정안 찬성	집중투표제 도입, 근로자 이사제 등에 대해 안건 별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 협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
금산분리 원칙 찬성 • 중간금융지주회사 반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필요	금산분리 원칙 유지 • 핀테크 등 신규사업 가능하게 은행법상 인터넷은행특별법 고려	금산분리 원칙 유지 • 중간금융지주회사 반대	금산분리 원칙 유지 • 중간금융지주회사 반대	새 정부 차원의 입장이 분명함으로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
공정 거래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범정부차원 을지로위원회 구성 (갑질 근절) • 가맹점, 대리점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불공정 기업 공공분야 퇴출 • 중소기업부 신설	대기업 담합, 기술 탈취 처벌 강화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 도입 •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갑질 근절 위한 특별법 제정 • 프랜차이즈 계약연한 15 년으로 연장 •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가맹본부·가맹점 이익 공유제 도입 • 하도급법, 대리점법에 집단적 교섭제 도입	을지로위원회,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등은 정부 정책결정 사항임으로 추진될 것. 중소기업벤처기업 부는 원만히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

공정 거래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공정위의 검찰 전속고발권 폐지 •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 •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누진세 도입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 • 공정위 위원 독립성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위 조사, 심판 기능 분리	전속고발권 폐지 •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는 모든 정당 공약사항이었음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 역시 행정 결정 사항이므로 추진될 것
소비자 피해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 피해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집단소송 적용 분야 확대 • 디스커버리 제도로 소비자 입증 책임 경감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 확대	소비자 피해 부문부터 집단 소송제 우선 도입	집단 소송제 확대라는 큰 방향성에 합의한 채 세부 사항들이 조정될 것으로 보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분야는 신중 3배 이내로 배상액 제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징벌적 손배제 확대	재벌 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적용 분야 논의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분야에 대한 입법부 내 협의를 거쳐 임기 내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국민연금 운용 투명성 확대					
정부.가입자대표 견제로 국민연금 투명성 확보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 위해 기금 운용기구 설립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확대	국민연금이사장을 노사정 협의체에서 선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추천 축소	방향성에 대한 논의 후 입법부 의 대안방향 으로 관련 법규 개정될 것 예상
과세 (법인세 인상)					
법인세 실효 세율 조정 후 명목세율 인상 • 재원부족시 법인세 인상 • 부동산 보유세·고소득층 과세 강화	정규직 우수 채용 기업, R&D 우수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 담뱃세, 유류세(2000cc 미만 차량) 인하 • 불로소득과 지하경제 양성화	법인세 정상화(임금구조 개선 기업에는 인센티브) • 부동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대기업·고소득층 비과세 감면 축소	조세부담률 19%-21.5%로 법인세 인상 (22% → 25%)	법인세명목최고세율 25% 회복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 사회복지세 신설	비과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을 축소해 우선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우선될 것으로 전망 각 증세안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지에 대한 입법부 내 논의 후 점진적 증세로 예측
환경 (화학물질 관리, 원자력)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 •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 •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해 종합적으로 수행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 •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 •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세부적인 정책 사항 조율 후 '안전'에 방점을 둔 입법부 및 행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도출될 것으로 관측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중단		신규원전 건설 금지	원전 불안 해결	2040 원전 제로	원전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사항으로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출처: 공약집, 언론사 질문에 대한 답변 기사참고)

V. 향후 주요 정치 일정



•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선서 직후 첫 업무 지시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이었으며,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의 지명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새 정부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확인된 통합, 정의, 개혁의 시대 정신을 받들어 청와대, 정당, 정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지혜로운 협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위축된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이 예측 가능하기를,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이후 격변의 정국에서 각 정당은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정치적 노선 정비에 더 관심을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무총리 임명 동의, 정부조직법 개정,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 등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해당 정부 조직이 자리잡기를 기다리면서 불확실성 속에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낙선한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확인된 여타 ‘시대 과제’ 역시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화(Dialogue)’의 새 시대에 정부와 기업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믿음 아래 투명하고 창의적인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리더의 성공 여부에는 첫 100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기간에 새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장의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들은 임직원과 고객뿐 아니라 정부, 국회, 시민사회와 ‘시대 과제’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자원과 전문성, 경험을 잘 활용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진정성 있게 꾸준히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 2017 FleishmanHillard
Contact +82-2-2051-7077 isabelle.lee@fleishman.com | Fleishmanhillard.co.kr
Address 7th Floor, J. Tower Dosan Daero 139, Gangnam-gu, Seoul, Korea 06036